

# Hansun Brief

발행일: 2023년 6월 27일(통권263호) / 발행인: 박제환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괴담 사회의 실체 - 후쿠시마 처리수를 중심으로 -

1. '괴담의 사회학', '괴담 테크닉'의 중요성
2. 괴담의 사회적 배경
3. 괴담의 생산·유포 회로
4. 정치적 과학자의 등장
5. 괴담의 테크닉
6. 괴담의 딜레마
7. 전문가의 중요성
8. 괴담의 천적은 공정성, 그리고 정치가와 언론
9. 공적 권위의 중요성
10. 반성과 백서의 중요성

홍성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괴담의 사회학’, ‘괴담 테크닉’의 중요성:**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를 놓고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민주당의 대표는 처리수를 ‘핵폐수’로, 태평양으로의 방류를 ‘우물에 독을 넣는 행위’로 단정 짓고 있다. 반면 원자력학회, 원자력의학회 등등의 전문가들은 원전 처리수의 안전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의구심도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놓고 벌어지는 괴담과 선동은 전문가들의 설명과 해명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괴담의 생산·유포자와 이를 비판하는 전문가들 모두 이 사회의 여러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괴담이 매우 집요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괴담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괴담의 사회학’, 괴담의 논리를 ‘괴담 테크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괴담의 사회적 배경:** 그렇다면 괴담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나와 한 사회를 불안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일까? 괴담의 긴 역사를 일견해보면 그 답은 분명하다. 1650-1750년 사이에 유럽에서 4만 명 이상을 희생시킨 마녀사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이 시기는 소빙하기(小氷河期)로 식량 생산이 줄고 30년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는 시대였다. 동시에 중세시대 신앙 중심의 세계관이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념 충돌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것이 마녀사냥의 사회적 배경이었다. 1920년대 독일에서는 유대인이 독일군을 후방에서 배신하여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했다는 이른바 ‘등 뒤의 비수’라는 괴담이 히틀러와 괴벨스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이는 패전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베르사이유 조약이 부과한 과도한 전쟁 배상금으로 고통받는 독일 국민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벌어지자 히틀러는 괴담과 포퓰리즘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그 결과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의 배경에는 조선인 이주 노동자로 인해 직업을 잃은 일본인 노동자들의 불만 즉 경제적 갈등이 있었다.

**괴담의 생산·유포 회로:** 여기서 이들 괴담의 생산과 유포가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무기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지난 십수 년 한국에서 일어난 괴담을 열거해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1997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친 이른바 병풍사건은 좌우 이념 갈등을 배경으로 대통령직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괴담이었다. 2008년의 광우병 괴담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및 반미주의를 배경으로 좌에서 우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났다. 2010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폭침되었음이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졌지만,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심지어 자폭설 등이 최근까지 끊이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은 친북 성향을 지닌 정치인, 지식인과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 괴담은 ‘[자칭]전문가-언론-정당-사회단체-국민 일부’라는 연계 회로 속에서 태풍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때 이들을 연결하는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매체가 큰 역할을 한다.

**정치적 과학자의 등장:** 광우병, 천안함 그리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놓고 벌어지는 괴담의 내용 자체는 정치와 무관한 과학과 공학의 문제다. 예를 들어 광우병 괴담의 이론적 근거는 수의학, 생물학, 보건의학 등의 대학교수들이 제공한 것이고 현재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도 한 원자력 공학 교수가 열정적으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괴담의 테크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쉽게 부정하기 힘든 논쟁술이 개발된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극진하게 배려하는 괴담이 정서적으로 더 옳다고 느끼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측과 ‘걱정하지 말라’는 두 전문가의 주장 중에서 어떤 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까?

**괴담의 테크닉:** 만일 괴담 반박의 과학적 근거가 매우 강력하다면 괴담은 일단 ‘과학과 기술’이 100% 정확하다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말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지

적은 어떤 과학자도 반박할 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100% 확실성을 요구하는 과학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광우병 괴담 시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걸리면 100%다’라는 괴담파에 속하는 한 유명 작가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에서도 ‘검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방사능 증가’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에 달렸다. 만일 100% 안정성, 확실성 요구의 난관을 돌파하였다 해도 괴담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괴담을 반박하는 전문가, 국내외 기구의 공신력과 권위가 부정된다. 광우병 괴담에서는 한국의 식약청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고, 국제수역기구(OIE)도 미국 축산업자들의 조종하에 있다는 주장을 대학교수가 하였다. 이번 후쿠시마 괴담에서 IAEA가 일본과 가깝다, 한국에 온 영국의 한 원자력 전문가는 돌팔이 과학자다, 일본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등등의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은 괴담 테크닉의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고 조만간 괴담을 논파하는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연구비 수혜 등과 관련 친정부 어용학자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괴담의 마지막 테크닉은 더 단순하고 강력하다.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증도 없고 전문가의 찬반도 필요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전문가들의 논쟁을 볼 시간도 없고 여러 전문용어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지금 서울시를 덮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현수막이 바로 그 마지막 테크닉의 대표적 사례다.

**괴담의 딜레마:**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괴담에 대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우선 괴담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놓고 조직되는 정교한 현상이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사회에서 괴담은 바로 이 자유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바꿔 말해 괴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크며, 근거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광우병 당시 MBC PD수첩에 대한 어떤 재판의 1심 판결은 MBC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도 어려운 과학적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고, 또 국내외에는 항상 괴담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괴담은 민주주의에 매우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히틀러의 괴담은 독일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이런 점에서 괴담은 전염병만큼 혹은 전염병보다 더 위험한 현상이다. 이것이 괴담의 딜레마이다.

**전문가의 중요성:** 앞에서 언급한 괴담의 생산 유포의 회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칭]전문가’가 그 한 연결 고리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사실 판단은 모든 괴담 해독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하다. 광우병의 경우 공적 권위가 무너지고 사적 권위들이 이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이 괴담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싸운 수의학 및 의학 전문가들은 드물었다. 과학자들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괴담을 비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이 아니라 학회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과학자 집단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보다 훨씬

중요하고 공신력이 있다.

**과담의 천적은 공정성, 그리고 정치가와 언론:** 이제 약간의 희망을 이야기 해보자. 과담의 천적이 있는데 그것은 공정성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공정성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체제의 두 기둥이다. 만일 정치가와 언론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공정한 여론 형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과담의 문제는 사라진다. 물론 이들에게서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입법부 내에 초당적인 모임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즉 과학자 출신이거나 과학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의원들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와 같은 것이 나오면 그 안전성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내외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언론에서 전문가들을 불러 찬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동일 언론이 뉴스나 여타 프로그램에서 과담을 유포하거나, 토론의 사회자가 편향된 의견을 갖고 있거나 지식이 편협한 경우, 무엇보다도 과담과 정론이 서로 동일하게 취급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럴 경우 국민들에게 모든 과담과 정론의 심리적 확률은 50:50이다. 과학과 공학의 문제에서는 공적 기관의 판단을 충실하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길이다.

**공적 권위의 중요성:** 이제 전문가의 권위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 천안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공적 권위가 훼손되거나 무너졌을 때, 과담이 급속하게 퍼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공적 권위란 관련 학회나 안전위원회나 식약청과 같은 국내외 국제기구들, 그리고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사나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이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공정성은 정치나 경제, 이념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신뢰는 결코 금방 형성되지 않는다. 4대강 보의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보면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광우병 시위 당시에도 노무현 정권하의 식약청의 판단과 이명박 정권하의 판단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과담이 폭풍처럼 확대될 때, 내용은 과학적으로 옳았지만 식약청 게시판에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반성과 백서의 중요성:**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반성 없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이 초유의 과담 사태에 대한 책이 3권 나왔다. 한 권은 당시 보건부 차관이 쓴 고통의 기록, 다른 한 권은 한 의사가 당시 포항공대 생물학 관련 게시판에 연재한 광우병의 과학적 분석이고, 세 번째 책은 본인도 필자로 참여한 광우병 촛불 시위의 발생원인 및 경과에 대한 기록으로서 모두 사적인 책이다. 즉 공식적으로 광우병 사태에 대한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그러니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대책도 나올 수가 없었다. 사태가 가라앉은 것으로 만족하고 정권은 잊기 바빴다. 이번에도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거의 확실하게 후쿠시마 처리수 과담과 그 반박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다음 괴담에 대한 확실한 예약이나 다름없다.

괴담은 빛깔이 고운 독버섯처럼 잘 자라는 환경이 있고 끄는 힘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괴담 친화적 인프라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괴담은 그 생산·유포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괴담 전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할 때 생화학 등 어떤 무기도 허용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뀔에 따라 괴담의 유효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괴담이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지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고 또 이런 사실이 전파되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괴담의 생산·유포자들도 이 점을 알고 단기적으로 집중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

여기서 괴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 먹기, 회 먹기, 후쿠시마 처리수 마시기 등은 국민 수준과 관련된 일이지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怪談廳이라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거짓 선동이 일상이 된 한국에서는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공정성을 갖춘 사회 환경과 기구를 만드는 것, 이때 공식적 기구를 정치가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괴담 유포를 반윤리적 행위로 낙인 찍을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대학들이 나서야 한다. 학자에게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연구와 교육에도 윤리적 금기들이 있다. 국민에게 전문적 지식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은 학자의 봉사활동에 속한다. 이런 봉사활동에서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설, 국내외의 학문 공동체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럴듯한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양심 있는 지식인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뿌리는 행위는 학자의 봉사 윤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괴담에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괴담 생산에 참가한 전문가를 학문 세계가 윤리적으로 대응만 하더라도 괴담 현수막을 아무리 많이 걸더라도 괴담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 수십 년간 괴담에 시달렸으면 학자의 윤리와 사회의 공정 인프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또는

<https://www.hansun.org/korean/support.php>을 클릭해 후원신청을 보내주세요.